



안보전략논단

www.korva.or.kr

발행인: 김진호 | 편집인: 박세현 |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Vol. 002 | 2021. 04. 01.

바이든 시대 한미동맹의 과제
신경수

디지털 강군과 스마트 국방에 요구되는 리더십
윤원식

북한군의 역사 날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
최윤철

바이든 시대 한미동맹의 과제

신 경 수

(한미동맹재단 사무총장)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

미국 대외정책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동맹 및 우방국과의 신뢰 및 협력복원에서 나타난다. 바이든 정부는 3월 12일 일본, 인도, 호주 정상을 화상으로 초청하여 최초로 쿼드(Quad)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쿼드는 법치에 기반을 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는 4개국 안보협력체다. 바이든 대통령이 첫 다자 정상회담으로 쿼드를 택한 것은 바이든 정부의 전략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미 국무, 국방장관은 3월 15일부터 한국, 일본, 인도를 방문하여 전략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주요 인사들은 미 국무, 국방장관의 한국방문과 2+2 회의결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한다. 이번 방한은 미국이 한미동맹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 3대 키워드 : 오바마, 원칙과 절차, 동맹

바이든 민주당 정부의 정책방향을 예측함에 있어, 미 정부 주요 보직자들이 대부분 오바마 정부에서 핵심 실무를 담당했던 관료들임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특징은

바이든 정부의 업무수행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전통적인 민주당 정부의 정책방향과 절차를 따를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이러한 예상은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바이든 정부는 의사결정에 있어 하향식보다는 실무의견과 유관기관 공조를 중시하는 상향식 시스템을 적용한다. 국가안보 및 국방 전략의 큰 틀 안에서 원칙과 절차가 강조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맹 및 우방국 공조는 가장 우선적인 가치를 지닌다. 대외정책 수립에 있어, 동맹 및 우방국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미국의 최우선 전략목표, 인도태평양지역 우위 확보 및 기존질서 유지

바이든 정부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인도태평양에 있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인도태평양을 미국의 미래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판단은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중시전략, 트럼프 정부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더욱 정교하게 보완될 전망이다. 이러한 전략의 중심에는 중국위협이 자리한다. 필립 데이비스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중국을 “가장 큰 우려 (primary worry)”로 평가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강압 외교를 자유롭고 개방된 기존질서를 무너트리는 요소로 간주하고, 동맹 및 우방국과 함께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다만, 중국과의 긴장조성을 방지하고 우발충돌을 차단하기 위해 대화와 제도 보완을 병행할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 대외전략 구상의 핵심 : 쿼드(Quad)

미국의 대중국, 대북한 전략은 4월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동맹 및 우방국과의 양자 및 다자 협력을 통한 중국 억제 및 북한 비핵화 방안이 담길 것이다. 쿼드는 인도태평양전략의 중심에서, 나토와 같이 역내 질서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데이비스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쿼드를 “민주주의의 다이아몬드”로 표현하면서, 쿼드의 잠재력과 영향력을 부각했다. 쿼드는 안보협력을 넘어 경제, 첨단기술, 국제질서 등을 다루게 된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나토와 같은 조약에 의한 안보협력체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의 상호 협력체로서 쿼드를 발전시키고 있다. 실질적으로 쿼드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은 향후 양자 및 다자 공동연습·훈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의 “주요 국방파트너”인 인도도 미국과 공동연습, 상호 운용성 강화, 정보공유, 우주·사이버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쿼드의 위상과 영향력, 활동범위는 획기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책 과제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은 물론, 화생무기와 인권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정부 핵심 관료들은 과거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약속파기로 좌절을 경험한 인사들이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북한에 보다 확실한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미·북 협상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Plan B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는 대외전략 구상·이행에 있어 동맹인 한국의 입장과 우려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동시에 동맹의 역할분담과 기여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국익을 고려하면서 공세적, 선제적, 창의적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한·미간 적극적인 소통과 다양한 대화채널의 확보 및 활용이 요구된다.

한·미 현안이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은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한·미는 최종운용능력 검증 및 조건충족 시기 결정에 있어, 군사적 판단이 지배적 요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에이브람스 사령관이 강조한 실사격 훈련여건 보장은 Fight Tonight 대비태세의 핵심이다. 주한미군의 실사격 여건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시급하다.

쿼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쿼드에 직접적인 참여가 제한된다면 창의적인 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가 한·미·일 안보협력을 주도하는 방안, 한·미·일이 함께 아세안 국가에 대해 안보지원을 하는 방안 등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일간 정치·역사문제와 안보문제를 분리하고 한·일 안보협력을 재개해야 한다.

한·미간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통해,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과 우리의 대북한 전략 및 대중국 전략을 일치시켜야 한다. 한·미간 공통분모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주한 미 대사 및 연합사령관을 통해 한국의 입장이 미측 의사결정권자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사 및 연합사령관과의 주기적인 소통, 신뢰구축이 필요하다. 바이든 민주당 정부의 현지 대사 및 사령관의 견해를 중시하는 업무 수행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차원의 노력이 통합되어야 한다. 우리는 민주당 정부와 협력했던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차원에서 미국과 소통하고 있는 친선 단체들도 많다. 이들을 활용하여 우리의 국익이 달성되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강군과 스마트 국방에 요구되는 리더십

윤 원 식

(재)(글로벌스마트융합센터장)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201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 일명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에 의해 공론화된 이후 이 시대의 화두가 된지 5년이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Hyper-connected)과 초지능성(hyper-intelligence)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융복합이 특징이다. 사람과 사람은 물론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서로 연결되고, 현실과 사이버가 융복합 되고 있다. 최근에는 수많은 가상(추상, meta)과 현실세계(우주, universe)가 연결되어 나타나는 ‘메타버스’(metaverse)가 상용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학문이나 산업, 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영역과 경계가 없어지거나 불분명해지고 무한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 발전해 가고 있다.

익숙해진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상징 용어들

자동차나 스마트폰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융복합 기기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컴퓨터 시스템이 핵심인가 아니면 자동차 공학이 핵심인가? 스마트폰은 전화기가 핵심인가 카메라가 핵심인가 아니면 인터넷 활용 기능이 핵심인가? 어느 것이 주된 기능이고 핵심이든 간에 이제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졌다. 다양한 기술과 문화가 서로 연결되고 융복합 되어 한계가 없는 현실에서 우리는 불편함 없이 활용만 잘 하면 된다.

오늘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기술을 활용한 각종 스마트 기기는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블록체인(block chain),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혼합현실(MR, mixed reality)이라는 용어도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든 간에 이미 낯설지가 않게 되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언택트untact), 온택트(ontact) 일상은 이러한 현실을 쉽게 실감하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 강군과 스마트 국방 건설을 위한 군의 정책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군대라고해서 예외가 아니다. 국방부도 디지털 강군과 스마트 국방 구현을 통해 미래를 주도하는 국방역량 구축을 위해 장단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 관련 전 분야에 적용하여 고효율의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를 위해 첨단센서, 인공지능·빅데이터, 무인체계, 신추진, 신소재, 가상현실, 고출력·신재생에너지, 사이버 등의 8대 핵심기술을 적용한 첨단무기체계 및 전력 확보와 첨단과학기술의 신속 적용, 선도 기술 확보 등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 훈련을 위한 VR·AR 기반의 전술·전투훈련, 장비숙달훈련과 군수정비 분야의 디지털 팩토리는 물론 안전관리 분야에서도 ICT 기술을 적용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바람직한 정책이다. 계획과 문서상으로는 보고용이 아닌 제대로 된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융복합형 인재에게 필요한 5C 역량(soft skill)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융복합형 인재이다. 이러한 인재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5C이다. 즉 창의력(creativity), 소통력(communication),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complicated problem solving), 비판적 사고력(critical thinking), 협업 능력(collaboration)을 갖춘 인재이다. 오늘날 기후변화, 환경변화, 신종 바이러스 출현, 사이버 재난 등 각종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현상도 복합재난화 양상을 띄고 있다. 안보의 개념도 이미 전통적인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 사회안보를 비롯한 각종 재해 재난 등의 비전통적인 안보 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포괄안보 시대이다. 이러한 사회 환경과 안보환경에서는 특정 분야의 특정 전문가가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영역과 경계의 벽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결되어 융복합될 때 문제 해결 능력은 더욱 높아진다. 국가안보 또한 예외가 아니다.

군의 지휘통솔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정보통신 기술이나 무기체계는 사회의 기술발달과 더불어 하루가 다르게 변화 발전되고 있는데 군의 지휘통솔이나 리더십은 어떠한가? 지휘통솔 전반에 있어서 도구, 수단, 방법의 최신화와 합리화가 요구된다. 장병 모두가 5C 역량을 비롯한 디지털 역량과 소프트 스킬(soft skill)을 잘 융복합할 수 있어야 4차 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 지금 우리 군의 주 구성원인 병사들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정보통신 기기를 쉽게 다루고 이에 대한 활용과 적응력이 빠른 이른바 Z세대(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자)이다. 초급

간부들 역시 Z세대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군 지휘통솔과 리더십은 5C 역량을 갖춘 ‘스마트 리더십’으로 탈바꿈해야 ‘스마트 국방’을 만들 수 있다. 특히 Z세대와 디지털 갭이 큰 상급제대 지휘관들의 디지털 마인드와 5C역량의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스마트 리더십을 위한 역량 강화와 정책적 노력 필요

스마트 리더십이라고 해서 지금까지의 아날로그 리더십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군대의 특성상 스마트 리더십은 종래의 아날로그식 리더십을 바탕으로 디지털 수단과 도구, 역량을 더 한 리더십이어야 한다. 정과 의리, 전우애로 인화단결을 추구하는 아날로그 리더십 위에 4차 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 리더십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필자는 이를 ‘디지로그 리더십’으로 명명한 바 있다) 지금은 군대도 각종 교육훈련과 병영생활 전반에 있어서 과거의 주입식·강의식·일방통행 식에서 벗어나 개방적인 마인드로 열린 소통과 대화를 통한 교육훈련과 병영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 군이 명실공히 디지털 강군과 스마트 국방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역인 Z세대 용사들의 임무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동기를 부여 할 수 있도록 모든 장병들이 5C역량과 스마트 리더십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진정한 디지털 강군 육성과 스마트 국방 건설은 ‘5C 역량의 강화와 스마트 리더십의 구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북한군의 역사 날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

최 윤 철

(상명대학교 군사안보학과 교수)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편집위원)

북한군의 모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지정 과정

2018년 1월 22일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2월 8일을 ‘조선인민군 창건일’로 변경하고 4월25일은 “조선 인민 혁명군 창건일”로 하기로 했다고 로동신문 등을 통해 발표 하였다.

2017년까지 북한에서는 지난 1948년 정규군으로 “조선 인민군”이 창설되었고, 본래 2월 8일을 군 창건기념일로 삼아왔다. 그러나 1978년 이후에는 김일성 당시 주석이 1932년 만주에서 “조선 인민 혁명군(항일 유격대)”을 조직한 날이라는 4월 25일을 ‘군 창건 기념일’로 변경됐다. 기념일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정리하자면, 북한의 정규군은 북한 정권 수립 약 7개월 전인 1948년 2월 8일 창건 되었다. 이후 북한은 1978년에 조선인민군 창건일을 1948년 2월 8일에서 1932년 4월 25일로 변경하였으나, 2018년부터 다시 1948년 2월 8일로 변경해 재지정 하였다. 그동안 ‘조선인민군 창건일’로 기념해 온 1932년 4월 25일은 반일 인민유격대인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로 지정하였다.

북한군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한 역사 왜곡

그러나 북한에서는 4.25일이나 2.8일에 대한 성격규정에 따라 그 의미와 창건일 제정에 수차례의 변화가 있었고, 이는 북한 스스로도 북한군의 정통성이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뿌리가 없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한 예로 볼 수 있다. 또한 군이 먼저 창건되었다는 사실에서 보듯 북한군은 해방 이후 국가건설 과정에서부터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북한에서 군은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위상을 가진 기구이다.

조선인민혁명군은 항일무장투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조직되었다. 김일성은 1930년 여름 항일무장투쟁의 준비를 위하여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의 핵심들로서 조선혁명군을 결성했다. 김일성이 창건한 이 항일유격대는 “적극적인 군사활동과 대오의 확대강화를 위한 투쟁, 항일무장투쟁의 대중적 기반의 강화, 반일부대와외의 공동전선 형성 등 투쟁을 통하여 급속히 장성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군사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어 “1934년 3월 김일성은 항일유격대의 조직체계를 개편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을 편성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여러 개의 사단과 독립 연대로 편성되었고 매 사단이 유격활동에 적응한 정연한 조직체계를 가지도록 했다. 이를 두고 북한은 인민군이 항일 빨치산 부대의 전통을 계승한 군대임을 밝히고 있다. 북한에 의하면 이 혁명군을 골간으로 하여 1932년 4월 25일 안도에서 조선인민의 첫 맑스-레닌주의적 혁명무력인 반일 인민유격대인 항일유격대가 창건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편성으로 항일무장투쟁의 범위와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었고 따라서 그만큼 일제 침략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그리고 항일무장투쟁과 대중투쟁을 더욱 밀접히 결합시키고 대중운동을 양양시키는 데도 큰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이 조선인민혁명군이 편성됨으로써 군내의 군사간부들을 더욱 세련시키고 단련 시킬 수 있었고 그 결과 해방된 조국에서 창건할 정규군의 기초를 더욱 확고하게 쌓을 수 있었다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북한의 주장은 어느 정도 사실과 부합하는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조선인민혁명군은 존재한 적 없어

결론적으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존재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경력을 과도하게 신격화하는 과정에서 사실보다 매우 과장시켜 부각되었고, 사실상 오늘날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그대로의 조선인민혁명군은 존재한 적이 없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존재는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김일성과의 연계를 보다 강화 시키면서 부각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북한 측의 주장과 설명에는 일관성이 없다.

특히 조선인민혁명군의 편성일자에 대해서 북한은 한동안 1936년 편성을 주장했다가 지금은 1934년으로 정식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곧 오늘날 북한 측이 주장하고 있는 그대로의 조선인민혁명군의 존재는 없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1930년대 만주에서의 항일무장투쟁사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역사적 사실로서의 조선인민혁명군은 존재하지 않았고 조선인민혁명군이란 중국유격대 지휘하에서 활동 중인 한인부대를 가리키기 위해 고안된 이름이었다.

정리하자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존재는 1934년 중국 공산당 동만특위가 결성한 동북인민혁명군 제 2군 독립사를 과대 포장한 것이며, 김일성이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확대 개편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북한은 1977년 이후 조선인민군의 모체가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김일성에 의해 결성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는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1978년 2월에 와서는 1948년 2월 8일에 창설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군이 실은 1932년 4월 25일 김일성의 빨치산부대가 조직된 그날에 창건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1978년부터는 4월 25일이 창군기념일이라면서 그해 4월 25일을 46주년 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201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동계평창올림픽 개최 직전에 당시 기존의 정규군적 성격으로서의 창건일인 2월 8일을 '조선인민군' 창건일로 선포한 것이다.

북한군은 대남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무력이며, 수령을 옹위하기 위한 조직

역사적 전후 관계를 볼 때 조선인민군 창건일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과는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무력군으로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전통을 계속 강조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에서 군은 「조선노동당 규약」 등을 통해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서 체제수호의 보루이자 통치자를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군은 일반적인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군과 같이 '당의 군대'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혁명적 무장력으로서 '혁명의 군대'이다.

이와 더불어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에서 북한군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수령의 군대'이며 수령의 '사병'인 것이다. 북한군은 결국 대남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무력이며, 이를 지도해나가는 당과 당의 수뇌로 불리는 수령을 무력으로 옹위하기 위한 조직임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 의

• 안보전략논단 담당

02)499-0201/korvass0201@naver.com